

박대통령 내달부터 ‘지방챙기기’

지역순회 하며 지역공약 이행·SOC 등 직접 점검

허태열 비서실장 “지역발전위원장 이달 중 인선”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부터 지방을 돌며 지역현안들을 듣는 등 지방 챙기기에 본격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대통령 비서실장은 12일 청와대출입 지역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오는 27일 중국 순방 이후 지역공약

및 지역 SOC 정상화 방안 등의 문제를 놓고 순차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등 지방과 소통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또 “일부에서 정부가 지역 SOC사업을 축소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다소 사실과 다르다”면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진행

된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다만, “지난 대선 당시 지역 공약들의 경우 아직 그 사업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또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잘 모른다. 무엇보다 그 당시(공약이) 시·도지부나 국회의원들이 순가락을 하나 더 얹어 놓은 식이 돼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정리해 사업이 가능한지를 조사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다소 늦어지고 있는 지역공약 이행 계획 발표와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다”며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고 있으니 조금 기다려 달라. 늦어도 이달 말에는 발표될 것이다”고 답했다.

그는 지역발전위원장 인선과 관련, “이달 중 발표될 것”이라면서 “현재 로선 지난 위원장보다 더 지역과 행정을 아는 그런 분이 새 지역위원장으로 인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 실장은 “대통령을 비롯, 청와대가 앞으로 더욱 더 지역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지역이 차별받지 않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강기정 “광주은행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17일 분리매각 토론회…금융위원장 “光銀부터 분리매각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의원은 12일 최근 송기진 광주은행장 사의 표명과 관련, “정부가 낙하산 인사를 강행해 광주은행 민영화 의지에 찬물을 끼얹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은행장 사의표명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민간 금융회사인 ‘BS금융지주 회장’의 사퇴를 종용하고 그 자리에 낙하산을 투하하겠다는 보도가



있던 직후 발생한 일”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낙하산 인사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지역민이 원하는 광주은행 민영화와 지역환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광주은행장 선임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17일 국회에서 “광주·경남은행 지역환원 분리매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 의원은 “오는 26일께 예정된 공적자금 관리위원회 회의가 광주·경남은행 분리매각 여부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토론회는 분리매각을 통해 광주은행을 지역기업과 주

민의 품으로 환원시켜 독자생존의 방법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재운 금융위원장은 이날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에 대해 “이달말 발표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자회사 분리매각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이진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방은행 매각과 관련, “우리 금융지주가 (광주은행과 경남은행) 지방은행 두 개를 갖고 있는데 때때서 먼저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정부와 제10야당인 민주당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이른바 ‘야·정(野·政) 정책 협의회’가 12일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으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렸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왼쪽은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른쪽은 윤상직 산업자원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정치권, 남북회담 정상화 방안 ‘훈수’

황우여 “직급 대조표 만들자”

박지원 “총리급으로 격상을”

서울 남북당국회담이 막판에 취소되자 12일 정치권에서는 회담 정상화를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와 조언이 봇물을 이뤘다. 우선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특사로 활동했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 회담 무산과 관련해 “북한이 진실성을 갖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

다”며 “우리가 김 부장이 나오도록 강요한 것이 문제가 있었지 않나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나오라고 한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은 우리 정부에 구애해 대입시키면 부총리급”이라면서 “김 부장과 회담을 원한다면 차라리 총리급 회담으로 격상시켜 현안을 풀자”고 조언했다. 나아가 “양쪽 대표가 누가 나오든 회담장에서 마주 앉은 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양 정상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MBC ‘이재용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소중한 기회를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야 하는데, 형식을 가지고 내용 자체에 접근조차 못하게 된 것은 누가 뭐래도 하책”이라며 “김양건 부장은 우리로 보면 국정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합친 직책이라 사실 통일부 장관의 맞상대는 아니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참에 아예 ‘직급 대조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객관적 지표를 만들어 차이에 누가 높고, 낮니 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게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외양간’을 단단히 고쳐놓자는 얘기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정부 정책협의회

정부는 위기에 처한 지방 보육 제정과 관련, 국고 보조율 인상을 검토하고 보육 재정 5607억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연주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어떤 경우에도 정부가 약속한 무상 보육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야당과 충분히 협의해 무상보육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이날 야정협의회에서 전력난이 닥쳤을 때 대규모 정전상태를 막기 위해 ‘가정-대형 상가-산업체’

무상보육·전력대란 대책 논의 지방 보육 5607억 조기 배정

순서로 전력을 우선 차단하는 단전 매뉴얼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국민을 불모로 삼으려는 것”이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신자원부 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 되는 것에 대해서는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또 전력대란으로 국민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도 촉구했다

이번 협의회는 정부 추진 업무에 관한 정확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는 민주당의 요구로 이뤄졌으며 민주당에서는 장병완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정책위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진 장관과 윤 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인터뷰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동구가 기초의원

보궐선거 안 치른다

광주 동구선관위 결정

광주 동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영)는 12일 “동구의회 남순심 의원의 피선거권 상실로 결원이 발생한 동구가 선거구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 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국정원 國調 시기 공방

새누리 “수사 끝나고 하자” 민주당 “즉각 실시해야”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야는 11일 ‘국정원 국정조사’ 실시 시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이 지난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불구속 기소 방침을 발표하자 민주당은 “사실상 수사 종결”이라며 국정조사 즉각 실시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새누리당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2일

“원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이나 국정원 직원들의 기밀 누설 사건 등을 수사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뜻이다.

새누리당이 ‘선(先)수사종결’을 내세우며 유보적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당내 일각에서는 국정조사 실시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도 읽힌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9일 기

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 합의사항인 점을 들면서 국정조사를 바로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국기문란 및 선거개입 수사가 일단 일차적으로 마무리됐다. 전임 원내대표 간에 수사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다”며 새누리당에 합의 이행을 공식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전임 원내대표는 지난 3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01일
굿모닝 메디컬 타운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에 탄생합니다!

굿모닝 스포테인먼트 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